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11.27~28)

1. 강제징용 배상안 관련

□ [동향]

- 연합뉴스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 성금(1+1+ α)으로 기억인권재단을 설립,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연내 발의할 방침이라고 보도¹⁾²⁾

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아베 총리는 문 의장의 방안과 관련하여 “(일본 기업들의) 자산매각 강제집행 전에 법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”라고 하였으며, 비서관에게 한 국대사관과의 정보 공유를 지시³⁾
- 일본 측은 의장이 제시한 방안이 실현되면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이 집행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으며, 한일 청구권 협정(한일기본조약)의 토대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음.
- 스가 관방장관은 기금 설립을 위해 일본 정부가 출자하는 자금이 일본의 의도에 반하는 형태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국에 요구할 생각임을 표명⁴⁾

2. 불화수소 대한국 수출 추이

□ [동향]

- 일본 재무성이 28일 발표한 10월 무역통계에 따르면,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 금액은 4,063만 6,000엔으로 나타남(전년동월대비 94.2% 감소)⁵⁾

1) 「'문희상' 강제징용 해법될 수 있나...피해자 동의 '난망」 『연합뉴스』 (2019. 11. 28).
2) 동 법안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1+1(한일 기업 자발적 참여로 기금 조성.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) 방안보다 혜택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다만 동 법안은 일본 정부가 동의해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면,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어도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.
3) 「水説：日韓の2本のパイプ=古賀攻」 『毎日新聞』 (2019. 11. 27).
4) 「官房長官 “財団資金は日本の意向を” 「徴用」めぐる問題で」 『NHK NEWS WEB』 (2019. 11. 28).
5) 財務省, 「10月の貿易統計」 (2019. 11. 28)

- 수출 규제 이후 불화수소의 대한민국 수출은 금액기준 0(8월) → 372만 3,000엔(9월) → 4,063만 6,000엔(!10월)임.

* 단, 10월까지의 기체형 불화수소만 해당함.

3. 지소미아 관련

□ [양국 정부 동향]

- (한국 정부) 윤도한 청와대 수석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“일본 측은 분명히 사과했다”라고 재차 강조⁶⁾
- 보도에 따르면 22일 일본 정부가 합의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발표하자,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들였으며,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.
- 이 자리에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는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는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짐.
- (일본 정부) 일본대사관은 한국 정부가 일본 외무차관의 사과 메시지를 받았다는 한국 정부 설명과는 달리 “그런 사실이 없다”고 부정⁷⁾

6) 「日, '지소미아 발표 죄송하다' 외무차관 사과 메시지 전달」 『SBS』 (2019. 11. 26)

7) 「外務次官謝罪と韓国聯合ニュース合意巡り、日本大使館は否定」 『共同通信ニュース』 (2019. 11. 28).